



전경련 국제동향

5월 1째주

국제본부 국제경제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❶ AIIB-ADB, 협력 관계 구축 MOU 체결
- ❷ 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개시
- ❸ 보감회, 보험업 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 조치 발표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❶ 내각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위한 구체방안 제시
- ❷ 일본정부, 1억총활약플랜(안) 확정
- ❸ 파리협정 서명식에서 175개국 서명

3 OECD 주요 정책동향

- ❶ 제35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결과
- ❷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평가체제 구축 및 평가역량 강화

4 터키 건설시장 최근 동향

5 사우디아라비아 Vision 2030 발표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AIIB-ADB, 협력 관계 구축 MOU 체결

- 5.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진리첸(金立群) 총재와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양 기관간 자금 조달 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정기 고위급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AIIB-ADB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
- AIIB 진리첸 총재는 AIIB와 ADB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기초시설 자금조달 수요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ADB 나카오 다케히코 총재는 양 기관은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상기 MOU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자금조달 협력 분야에서 △공동 자금조달, △지식 공유, △정책 대화 등을 추진하고, 회원국 간 정기 고위급 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동 데이터 수집, △UN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및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등 협력을 추진할 예정
- 이 외에도 당일 AIIB는 두 금융기관은 MOU 체결 전 이미 도로 건설, 수도 공급 분야 공동 자금조달 관련 회의를 개최했으며, 첫 공동 프로젝트로 파키스탄 Shorkot 지역과 Khanewal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1-2 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개시

- 국가세무총국 왕전(王軍) 국장은 5.1(일)부터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에 한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 실시에 따라 베이징에서 첫 생활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영수증(發票)을 성공적으로 발급했다며, 부가가치세 개혁이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

- 왕천 국장은 비록 첫 생활서비스 업종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에는 성공했지만, ‘16.5.3(화)부터 중고주택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과 4대 업종 부가가치세 영수증 전면 발급 등 성공적인 부가가치세 개혁을 위한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다고 설명
- 한편 4.30(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발표에 따르면, 국무원의 부가가치세 중앙·지방정부 배분 3대 원칙에 따라, 향후 2~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50:50 비율로 공유할 예정
- ① 지방정부의 기존 재정 수준 유지와 안정적 경제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50:50 비율로 부가가치세 공유
- ②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고취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정부 귀속 비중을 높여 지방경제 발전과 하방 압박에 대응할 것
- ③ 동·중·서부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 중앙정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중·서부 지역,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이전지불을 통해 지방에 분배,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

1-3 보감회, 보험업 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 조치 발표

- 5.5(목)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보험회사 자금 운용 정보 공시 준칙 제4호>,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거래 정보 공시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용)>, △<보험회사의 지분 정보 공시 강화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용)> 등 3개 조치를 발표, 보험기업에 대해 정보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
- (보험회사 자금 운용 정보 공시) △역·내외 단일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이 30억 위안(누계), △역외 부동산 혹은 지분 투자 방식의 단일 부동산 사업 투자금액이 50억 위안(누계), △지분 투자 방식의 단일 역외 부동산 사업 투자금액이 10억 위안(누계)을 초과할 경우 정보 공시 의무화
-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거래 정보 공시)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단일 거

래 금액이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기업의 순 자산 1%를 초과하거나, 3,0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년(회계연도 기준) 내 누계 거래 금액이 해당 기업의 순 자산 5%를 초과할 경우 정보 공시 의무화

- (보험회사의 지분 정보 공시) 보험기업의 구조 변경 및 지분 변경 사항 정보 공시 의무화

* 특수 관계자 거래

- 지배·종속회사, 관계 회사, 관련 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과의 거래
- 보감회 담당자는 최근 일부 보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역·내외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운데 부채비율과 유동성 등 부문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어, 정보 공시 의무화 조치를 통해 투자 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 동시에 보감회는 ‘15년 특수 관계자 거래 감사 결과를 발표, △수출신용보험공사, 보하이재산보험(渤海財險), 중메이재산보험(中煤財險) 등의 특수 관계자 투자 금액이 직전 분기 말 기준 총 자산의 30%를 초과했고, △치엔하이생명보험(前海人壽) 등 9개 기업이 보감회에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13개 기업이 분기별 특수 관계자간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내각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위한 구체방안 제시

1.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요지

- 일본정부(내각부)는 4.25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아베총리)에서 명목 GDP 600조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5월 말 발표될 ‘경제 재정 운영방침’ 및 ‘1억 총 활약 플랜’에 반영할 예정임.
- 구체적 방안은 개인소비 활성화와 성장전략 가속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수요 확대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향하며,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개혁을 관계 각료에게 지시함.
- (가계에 대한 분배 확대) 내각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대기아동 해소 등 1억 총 활약사회가 실현될 경우 2020년도에 일자리가 117만개 증가하고, 가계 전체의 임금총액이 20.5조엔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13.7조엔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 육아지원, 개호지원, 고령자 고용 촉진을 통해 일자리가 2020년도에 117만개, 2025년도에 204만개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2020년도 3.3조엔, 2025년도 5.8조엔 증가
- *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시간당 임금이 2020년도 17.2조엔, 2025년도 23.7조엔 증가
- * 상기를 통해 가계전체의 임금총액이 2020년도 20.5조엔, 2025년도 29.5조엔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면 소비지출이 2020년도 13.7조엔, 2025년도 20.4조엔 증가
- (성장전략 가속화)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민관의 연구개발 투자총액을 GDP 대비 4%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직업 훈련 고등 교육기관의 설립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배출을 위한 대학원 신설 등 구체화, △경영인 등 고도의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유치 확대

등이 제시됨.

- (소비 진작) △전국평균 최저임금 1천엔 목표, △도시재생기구(UR) 임대 주택 임대료 할인 등을 통해 육아세대의 주택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 향상 도모, △일본판 블랙프라이데이 도입, △프리미엄 상품권 지급, △2023년 종료 예정인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영구화 등 검토함.

* 또한 비자완화 등을 통해 증가세에 있는 방일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항만정비 등 인프라 정비도 제시

2.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론평가

- 명목 GDP 600조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에 비해 GDP가 약 100조엔 증가하여야 하나, 내각부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에서는 600조엔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 않아 설비투자나 수출을 통해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파악이 어려움.
- 또한 600조엔 달성의 전제로 제시된 것이 ‘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이나, 최근 2년간 실적(2013년도 1.7%, 2014년도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0%대 전반’ 을 기록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확대가 과제가 될 것임.
- 성장전략 가속화 중 생산성 향상 목표와 관련, 생산성을 아무리 향상시켜도 국내에 수요가 없으면 판매를 전망하기 어려운바, 수요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임.
-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현역세대, 고령세대 할 것 없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 소비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방안에서는 ‘수익과 부담의 균형이 잡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을 내세우고 있으나, 세금이나 보험료를 억제하여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미 제시됨.
-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보험료 억제로 이어지는 의료 등의 세출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로 환원이 불가능

- 소비 진작 방안과 관련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나 프리미엄 상품권의 발행에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나, 재정투입을 통한 소비 진작은 결국 수요를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함.

2-2 일본정부, 1억총활약플랜(안) 확정

1. 1억 총활약플랜의 요지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핵심이 될 ‘1억총활약플랜(안)’을 확정하였으며, 5월 중순 정식 발표하여 5월 말 각의결정을 진행할 계획임.
- 시급성이 큰 내용은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성장전략 등과 같이 경제대책으로서 제시하고, 참의원 선거 이후 임시국회에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 예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70~80% 수준으로 인상, 불합리한 격차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통근수당·출장경비 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지급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 개정(2017년도 정기 국회 제출) 시행 예정임.
- 또한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2014년 18.1%에서 2020년도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성금 등이 활용될 예정
- (장시간 근무 근절)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노동 기준감독서의 잔업시간 단속 기준을 ‘1개월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일 것을 제시함.
- 「노동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정에 의해 시간 외 근무를 월 45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특별조건 부협정을 통해 45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 가능
- (고령자 고용 촉진) 또한 2016-2020년도까지 5년간을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장 축진을 위한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조성제도를 확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연내에 구체방안이 마련될 전망임.

- (보육 대기아동 대책) 보육시설의 대기아동을 2017년도 말까지 해소하고, 방과 후 아동클럽의 대기아동도 2019년도에 해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숙련된 보육교사의 급여인상 등 인재확보 방안의 강화도 제시함.

2. 1억 총 활약 플랜에 대한 평가

- 일본정부가 1억 총 활약플랜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제시하는 배경에는 기업 수익 개선의 혜택을 비정규직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 그러나, 플랜(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목표는 조성금 등을 지원하여 기업이 행동에 나서게 하는 등의 방안이 많아서 기업행동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기업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임.
-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일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등 방침을 제시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정규직의 임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총 인건비를 증액해야 하며, 총 인건비를 증액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규직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
- 상기 관련, 경제계(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두)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기업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비용 증가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 금년 노사 임금협상에서는 비정규직의 월급 인상률이 정규직의 월급 인상률에 비해 클 것이라고는 하나, 인력부족에 따른 임금인상의 성격이 강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는 전망할 수 없음.
-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대책 이외에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지역한정 정직원 등을 정착시키는 등 기존의 정직원 중심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필요할 것임.
- 한편, 1억총활약사회는 아베 총리가 작년 가을 아베노믹스 제2단계의 핵심적 내

용으로서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정책의 성격이 격차해소를 위해 '분배'를 중시하는 야당(민진당)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책을 채용함으로써 쟁점을 없애려는 의도가 엿보임.

2-3 파리협정 서명식에서 175개국 서명

1. 파리협정에 175개국 서명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 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 서명식이 4.22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어 175개국이 서명함.
- COP 21의 의장국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등 60개국의 정상에 참가, 일본에서는 요시카와 모토히데 UN 대사가 출석하였으며, 국제협정 서명 개시일의 조인 국가 수로는 과거 최대
- (파리협정의 내용) △각국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 △금세기후반에 온난화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실질적 배출량 제로 실현, △각국의 목표를 5년마다 수정,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지원을 의무화
- 금번 서명은 파리협정의 내용에 찬성하여 의회 등 국내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비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절차로, 향후 각국에서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서명식에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간이 급박하다. 세계는 파리에서의 합의를 함께 인식해야한다' 며 국제사회에 협조를 촉구,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모든 국가에 조기 협정 참가를 촉구한다.' 고 강조,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는 '2016.9월까지 국내 법적 절차를 끝내겠다.' 며 비준을 서두를 생각을 제시

2. 향후 전망 및 우려

- 파리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최소 55개국의 비준이 필요함.
- 온실가스의 2대 배출국인 미국 및 중국(배출량의 총 38%*를 차지)은 2016.3월의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비준할 방침을 이미 표명하였는바, 협정의 발효 가능성은 우세

- 다만, 미국은 2017년 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공화당이 정권을 쥐게 되면, 규범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어 예정대로 비준하여 규범에 참가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면도 존재함.
- 과거 미국은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참가할 의향을 표명한바 있으나, 그 후 중국 등의 불참을 이유로 이탈한 경위 존재
- 이번에도 미국이 이탈하면 여타국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 기운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세계는 미국 대선의 움직임을 주시중
- 마루카와 타마요 일본 환경대신은 4.22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내 비준 시기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진행하겠다.’ 고 말하는데 그쳐 비준은 빨라도 2017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는 등 일본에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방침을 확인하려는 ‘관망세’가 존재함.
- 일본은 감축목표 제출도 G7 중에서 가장 늦었는바, 2016.5월의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면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존재감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존재

3 OECD 주요 정책동향

□ 정보출처 :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3-1 제35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결과

- I.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글로벌 및 OECD 아젠다 성과 보고 및 향후 예산계획안 논의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COP21, Habitat III 및 UN의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글로벌 아젠다 및 녹색성장과 같은 OECD 전체 아젠다의 성공적인 이행과 분석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음
 - 2017-18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과제 관련 예산작업계획(PWB) 소개 및 의견 수렴
 - 2017-18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요 주제 및 세부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각 주제 및 과제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를 논의
 - 현재 각 연구과제 단위로 자발적 기여를 통해 유지되는 예산의 특성상, 유연한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
 -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몇몇 연구과제를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법을 고안 중/ 관심국가별로 그룹을 형성해 그룹 내에 조성된 연구예산을 OECD가 유연하게 집행함
 - 지역간의 생산성 격차 및 극복방안을 주요 주제로 연구된 Regional Outlook 201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 비도시지역 개발 정책 관련 특별 보고(Special Focu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 과거에는 농촌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개발되거나 경제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을 비

도시지역으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 중

- 즉, 도시와 비도시 지역은 분절적으로 구분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연속적인 공간이라는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
- 이러한 개념하에 비도시 지역을 크게 1.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저밀도 지역, 2. 도시와 인접한 지역, 3. 도시와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주목할 점은,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80%가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내의 공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며,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관찰된 결과를 보면 대 도시에 인접한 비도시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비도시지역을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 더딘 낙후지역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전환하여, 비도시지역이 지닌 기회요인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비도시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비도시지역의 자체의 성장 역량을 강화할 필요

II. UN-HABITAT III 행사 관련

- OECD 사무국에서 HABITAT III와 관련한 최근 활동 보고
- UN-Habitat는 Policy Unit 및 OECD와 함께 해비타트3를 위해 개최한 조인트준비 미팅에 대한 결과 보고
- * UN Habitat Policy Unit: OECD의 전문가패널로 UN Habitat3의 UNP(National Urban Policy)프로세스를 이끌 예정
- (멕시코) HABITAT III 관련 실무회의(Expert Group)가 2015년 11월 4일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어 도시계획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도시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 논의 함
- (한국) 한국은 HABITAT III와 관련한 활동중 하나로 2015년 12월 인천 송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UN-HABITAT NUP(National Urban Policy) 국제 공동 컨퍼런스의 성과에 대해 회원국에게 소개하고, HABITAT III 및 이를 위한 제3차 준비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및 관련 연구원으로 구성된 T/F를 이미 구성, 운영중임을 설명

- 또한, 국토부 장관(또는 차관)님이 참석할 계획이므로 OECD 사무총장이 동석할 경우 10개 이내 국가가 참석하는 고위급 오찬을 주최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

III. 최근의 도시개발 현황 관련(국가별 최근동향 발표)

- ‘최근 도심의 성장정책 및 고령화 등 도시의 구조적 변화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도시개발정책의 방향을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

* 144개의 도시(시단위)중 55개(38%)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주택노후화 등 심각한 쇠퇴가 진행중

- 도시재생의 실행방법으로서 도시재생의 3가지 유형(경제 기반형(5곳), 중심시가 지형(9곳), 근린재생형(19곳)) 있음을 소개하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13년 제정)과, ‘15년 출범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

IV. 한국 국토교통부-OECD 2015년 공동 협력과제 관련

-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참여(4.21일)하여 국토부-OECD 2015년 공동 협력과제인 ‘한국의 도로인프라, 포용적 발전, 교통안전’ 연구결과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 포용적 발전을 위한 국가 도로망 확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수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도로교통 안전부분 연구에 대해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높게 평가한 반면,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이 필요함을 지적
- 과제의 출간회(4.22일)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간선도로투자(간선도로과장) 및 교통안전 정책(국제협력통상담당관)에 대해 발표
- (간선도로 투자) 한국 도로의 현황 및 안전 투자, 도로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등 소개

- (교통안전) 한국정부가 교통사고사망을 감소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

V.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금번 제35차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정부의 도시개발 정책방향의 변화 사례를 소개. 저성장, 고령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고려한 기존의 전략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설명.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정책 방향 및 사례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모색할 필요

3-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평가체제 구축 및 평가역량 강화

1. OECD DAC 평가네트워크(EvalNet) 개관

- 1982년 원조평가 전문가그룹으로 설립, 현재는 평가 네트워크(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로 변경

[연도별 명칭 및 임무]

연도	명칭	임무(mandate)
1982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	◆국가간/다자기구 평가기관 간 정보, 경험과 협력 교환 강화 - 각 회원의 평가활동 개선, 방법론 및 개념적인 프레임워크 표준화 강화, 주요 평가연구 기획시 공유 기관간 코디네이션 개선 근거 수립
1998	Working Party on Aid Evaluation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에 대한 평가연구의 교훈에서 핵심을 추출하여 원조 효과성 개선에 기여 ◆주요 분야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하여 관심 있는 회원들간의 공동 평가연구 타당성 조사 ◆개도국의 평가역량 강화 방안 모색
2003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평가우수사례(Best practice)공유 ◆주요 개발주제에 대한 평가 증거를 종합하고 결과와 교훈을 공유 ◆협동을 증가시키고 평가역량개발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파트너와 협업

2. 제19차 평가네트워크(EvalNet) 주요내용

가. Agenda 2030 시대의 평가

- (SDGs 달성을 위한 OECD의 역할) OECD 통계국은 2030 개발의제 평가체제의 특징과 이와 관련 OECD가 가진 장점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SDGs 달성에 동참하기 위한 OECD 차원의 기여 활동을 소개함.
- SDGs 평가 작업은 세계·지역·국가 수준의 진척 현황 및 주제별 검토(thematic review)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행 모니터링은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에 의해 수립된 global indicators에 따라 측정·보고됨. 또한 UN 총회 후원으로 4년마다 개최 예정인 지속가능개발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SDGs 이행에 대한 고위 정책 수준의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OECD는 그 모든 활동에 있어 SDGs를 다양한 형태로 주류화 할 계획이며 회원국의 SDGs 이행 노력 동참을 독려할 계획임. 통계에서 거버넌스에 이르는 OECD의 전문성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며 특히 OECD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분석도구(tools), 동료검토(peer review) 경험 및 노하우는 SDGs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한편, SDGs 모니터링의 난점(challenges)으로 △ SDGs의 복잡성, △ 기준점(benchmark) 결여, △ 데이터 부족, △ 불명확한 책임성, △ 다초점(지구, 국가, 개인), △ 목표 간 중복 또는 상충 등을 꼽음.
- 구체적으로 SDGs 이행 측정을 위해 OECD는 IAEG-SDGs 작업 옹저버 참여, OECD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한 지표 데이터 제공, SDGs 연차보고서, 지역 보고서 작성(특히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경우 다수 OECD 국가 포함) 등을 통해 충분한 기여가 가능하며, 신규 지표 개발 또는 기존 지표 재설정이나 개별 국가 상황에 맞는 분석도구·플랫폼·가이드라인의 조정 등을 통해서도 기여가 가능함을 언급함.
- (UN과 UNEG 차원에서의 대응 활동) UNEG 의장인 Marco Segone는 2015년 국제평가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valuation)의 의의, SDGs가 평가 분야 및 국제평가 커뮤니티에 갖는 함의 및 그에 대응한 UNEG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소개함.

-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 지역단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92개의 평가 관련 이니셔티브 발족 및 행사가 개최되었고 특히, 정부, 의회, 시민사회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함. 증거 기반의(evidence-based) 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의 유용성이 부각 및 고양됨으로써 정책 영역(policy arena)의 일부로 평가를 재설정 하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global movement)이 발생함.
- 반기문 UN 사무총장(2015.3월, 2015 UNEG High Level Event): “모든 장소 및 모든 수준에서 평가는 새로운 개발 의제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국가 평가 역량 강화는 국가들이 정책결정에서부터 결과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주체적 입장에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임(empowers countries to be in the driver's seat). 이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people we all serve)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SDGs 목표 간 복잡한 연계성 및 평가 과정의 두 가지 주요 원칙*은 평가 관련하여 △ 평가에 대한 수요 증대, △ 기존 직선적(linear) 평가에서 다층 적(multi-layer) 평가 방법으로의 전환 요구, △ 평가 전문화(professionalizing evaluation) 경향 심화, △ 국제 평가 커뮤니티에서의 중심축 이동 (공여국 중심의 Global North → 수원국 중심의 Global South)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평가 참여 확대 및 가속화 등의 함의를 가짐.
- UNEG의 활동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평가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주도·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그리고 ‘성 인지적’(equity-focused and gender-responsive) SDGs 평가 방법과 관련된 작업(온라인 의견 수렴, 워크숍 개최, 가이드선 마련, 기술지원 제공 등)을 중점 전개할 예정임.

나. SDGs가 평가에 주는 함의 및 향후 영향

- 세계은행그룹 IEG 사무총장 Caroline Heider는 2015년이 개발재원총회, UN개발정상회의,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통해 중요한 개발 의제를 도출한 해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동 개발 의제의 이행 과정이 평가자 (evaluators)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성장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발표함.
- (성장기회) SDGs의 복잡성(complexity)이 새로운 규범(new norm)으로 작용하면서 평가자에게 △ 목표간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한 범분야적 (cross-sectoral) 접근

모색, △ 경쟁관계에 있는 정책목표 우선순위 간 Trade-offs에 대한 평가 (assessment), △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 및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데이터 및 그 분석·해석을 위한 능력 개발, △ 즉각 활용 가능한 평가 수단(tools)에 기반한 신속한 환류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도전과제) 다만 이 과정에서 평가 목적, 평가 주체, 평가 대상 수준 및 범위, 평가 방법론 등의 차이로 인해 △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 △ 평가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 공동 평가 실시의 어려움과 같은 과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 역량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다. SDGs와 평가역량강화(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 2030 개발 의제의 국가 주도 평가 및 파트너 국가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OECD DAC 평가네트워크 산하 ECD Task Team, UNDP, 일본은 각각 관련 연구 계획, 방콕 회의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와의 평가 워크숍 개최 사례를 공유함.

- (ECD Task Team 연구 계획) Task Team 의장인 영국 DFID의 Stephen Porter는 SDGs 이행을 위한 국가 주도 평가 시스템 정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과정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진행 계획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함.

- 연구의 중요한 내용은 ① Supportive Practices: 국가 주도 평가 과정 지원에 있어 유용한 사례와 유용치 않는 사례 확인, ② Partner Government Demands: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 평가 관련 지원 분야 및 방법 도출, ③ Civil Society Practice: 시민사회에 의한 SDGs 국가 주도 평가 지원 가능 분야 확인

- (방콕 회의 결과) UNDP 평가실 부실장인 Arild Hauge는 제4차 국제 국가 평가 역량 회의(2015.10월)의 결과문서인 ‘방콕 원칙’을 소개함.

- 동 원칙은 SDGs 평가 과정이 △ 성과, 도전과제 및 주요 성공요인 발견, △ 해결책과 우수 사례 확인 지원 및 국제 개발 시스템의 조정과 효과성 증진 △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 기여 등 평가의 순기능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국가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포함

- (일본 평가 워크숍 사례) 일본 외교부 ODA 평가실장인 Keiichi Muraoka는 △ ODA

평가 이슈 및 평가 방법 이해 제고를 통한 평가 역량 강화, △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과 투명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 개최 사례를 공유함.

- 현재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와 실시한 13차례 워크숍에서 파트너 국가별로 각기 상이한 수준의 평가 역량 및 제도화가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

라.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의 신기술의 활용

□ 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제고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사무국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발 평가에서 ICT 활용의 함의를 짚어보고, 국제환경기금(GEF)은 실제 빅데이터 활용 평가 사례를 공유함. 다수 회원국들이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사무국은 차기 회의에 동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ICT 활용) 독립 컨설턴트인 Linda Rafree는 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에서의 ICT 기술 활용 배경, 가능성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존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선용(smart use)이 필요함을 주장함.

- 장치(Device),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는 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 전 과정에 ICT 활용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ICT는 △ 데이터 수집 고도화(구조화된 데이터 수집, 실시간 데이터 획득 등), △ 새로운 평가 방식(복잡성 평가, 다차원적 지표 수립 등),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빅데이터 활용, 결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등), △ 형평성에 중점을(equity-focused) 둔 평가(모바일을 통한 데이터 수집 저변 확대, 현장의 실시간 피드백 등) 등 개발 평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줌.

- 반면,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 등 높은 초기 투자 비용(up-front costs), 해당 기기를 이용 가능한 그룹(wealthy and educated people)에 제한된 데이터 수집 가능성, 데이터 소유권 및 개인 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등 운용상, 방법론적, 윤리적·법적 문제점과 위험요소들이 ICT 사용 과정에 상존함.

- 따라서, 모니터링 및 평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결과 공유 단계에 이르기까지 ICT와 기존 M&E 수단의 적절한 결합,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ICT 활용 여부 판단 및 방안 마련, 부작용 보완 등 ICT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됨.

- (빅데이터 활용 사례) GEF 평가실장 Juha Uitto는 개발 평가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의 의의와 GEF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 평가 사례 결과 및 한계를 공유함.
- 빅데이터 분석은 한정된 평가 자원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개입방안(interventions)을 도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특히 전체 17개의 SDGs 가운데 9개 목표(2, 3, 6, 7, 9, 11, 13, 14, 15)가 전지구적 단위의 관찰(earth observation)과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위성 이미지, 원거리 센싱 등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예정임.
- 12년간(2000-2012) GEF 지원 생물보호구역과 비지원 지역 30,000곳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EF 지원 지역의 산림 훼손 속도가 비지원 지역에 비해 느리다는 것이 확인됨. 단, 동 결과의 메커니즘 해석(theory of change) 문제 및 동 결과에 영향을 미친 기타 요인들(contextual variables)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기술적·방법론적인 보완과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됨.
-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 회원국들은 개발 평가에서의 ICT 도입과 활용은 자원 및 기술 집약적인 방법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한계로 인해, 필요성에 비해 개별 기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도입이 어려움을 강조하며, 네트워크 차원의 협업 필요성을 제기함.

4

터키 건설시장 최근 동향

□ 정보출처 : 주터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4

터키 건설시장 최근 동향

□ 정보출처 : 터키 경제부 및 건설협회 발표 자료

□ 주요내용 :

1. 2015년 4/4분기 이후, 건설시장 성장 회복세 시현

○ 터키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터키 GDP 성장률은 4.0%로 집계된 반면 건설부문 성장률은 1.7%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작년 4/4분기에는 건설부문 성장률도 5.4%로 급 회복세를 보임

– 2015년 분기별 GDP성장률 및 건설부문 성장률은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

– 전체 GDP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상당히 높은 의존도 지속

※ 2015년 전체 GDP 및 건설부문 성장률 추이

- 전체 GDP : 2.5%(1분기)→ 3.7%(2분기)→ 3.9%(3분기)→ 5.7%(4분기)
- 건설부문 GDP : -2.7%(1분기)→ 1.9%(2분기)→ 2.0%(3분기)→ 5.4%(4분기)

2. 2016년 초반 주택건설시장 활성화 지속

○ (주택 판매) 2016.2월 기준 주택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

– 재고주택 판매량은 거의 변화없었으나, 신축주택 판매는 18.3% 증가

– 다만, 모기지주택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7.6% 감소함

○ (주택 가격) 신축 주택가격은 2016.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9.1% 상승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New Residence Price Index(2010=100) 추이 : 166.7(2015 4분기) → 167.5(2016.1월) → 168.6(2016.2월)

3. 터키 기업의 해외건설 동향 :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주 감소세 지속

- 터키 기업들은 해외건설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프로젝트 수주량 및 수주액 모두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고전 중
- 최근 3년간 해외건설 수주 추이는 417건 300억불(2013년)→ 328건 265억불(2014년)→ 179건 205억불(2015년)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재국 일부 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 수주 부진을 국내 주택건설 시장에의 집중 및 기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만회하려는 모습도 관찰됨.

□ 정보출처 :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 사우디 정부 발표 및 언론보도 종합

□ 주요내용 :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는 사우디 Vision2030 내용을 발표함.

가. 사우디 경제의 석유의존 해소

- (아람코 공개 및 PIF 국부펀드화) 아람코 주식을 5% 미만 상장하고, 주식 매각자금과 국가 소유 부동산 매각 자금을 PIF로 이전하여(약 2조 달러 규모로 추산), 국부펀드를 조성, 국내외 투자에 활용
 - PIF의 의사결정은 왕실이 주도하지 않고 이사회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
 - 아람코는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
- (비석유분야 세입 확대) PIF의 국내외 투자를 통한 수익, 재정개혁 및 신성장분야 산업 육성을 통해 비석유분야 세입을 확대하여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탈피
 - 민간부문을 GDP의 40% 수준에서 65%까지 늘리고, 비석유분야 세입도 현재 1,630억 리알에서 1조 리알까지 확대
 - 보건의료, 지방행정, 주택,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여 외국 인직접투자를 GDP 대비 현재의 3.8%에서 5.7%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비중도 GDP 대비 20%에서 35%로 제고
- (보조금 삭감) 전기, 물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왕실 등도 예외가 아님)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나. 신산업 육성

- **(관광)** 메카 및 메디나 순례자 수를 현재 800만명 수준에서 2020년 1,500만명, 2030년에는 3,0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관광수입을 확충
- ※ 메카 및 메디나의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적 의례에 참가하는 것은 무슬림의 기본 의무로 이슬람력 12월에 이루어질 경우 하지(Haji), 그 이외 기간의 성지순례는 움라(Umrah)라고 부름.
- **(광업)** 사우디의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을 감안할 때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바, 9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매년 70억 리알의 이윤을 창출할 계획
 - 전세계 우라늄의 6%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금, 은, 구리, 우라늄, 인산염, 이산화규소 등의 광물도 개발 수준은 3~5%에 불과
- **(방산)** 자체 생산하는 방산물자 비율을 현재 2%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국영기업(지주회사 형태)을 설립하여 산업을 육성
- **(고용)** 현재 11.6%인 실업률을 7%까지 낮추고, 여성의 경제참여도 현 22% 수준에서 30%수준까지 확대
 - 소매업(retail) 분야에서 2020년까지 약 백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자상거래 등 발전도 촉진
 - 사우디에 장기간 체재중인 무슬림과 아랍인을 대상으로 영주권 제도(green card)를 5년 이내 도입하여 투자 촉진
- **(신재생 에너지)** 사우디의 국내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지 현재의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아직 저개발상태에 있는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개발하여 9.5 기가와트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2. 국내외 언론 평가

- **(국내 언론)** 사우디내 언론은 금번 발표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자원이 많지 않은 국가들이 포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하면서 자원이 풍부한 사우디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평

- 사우디 주식시장(Tadawul)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주가지수(TASI)가 전일 대비 2.53% 상승한 6,809 리얄에 마감(3개월 최고치)
- (해외 언론) CNBC 등 해외 언론은 사우디가 1970년대부터 석유의존 탈피, 산업 다변화 등 경제구조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번 개혁 최대과제는 비전의 실천에 달렸다고 지적
- 사우디 기업의 대부분이 국영이며 전체 노동자의 2/3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주도 경제구조에서 정부지출 삭감은 GDP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20년전 두바이 개혁모델을 연상케 하는 야심찬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이나, 저유가, OPEC의 시장지배력 약화,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확대 등 대외환경은 사우디에 우호적이지 않음.